

이 대통령 “남성 국방 의무 갈등 요소 되기도… 과학기술 대체 복무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투자하고 과학 기술인들이 인정받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은 그 나라 역량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돌아섰다.

그러면서 과학 인재들을 향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발전하느냐 따라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여러분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 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 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명예롭게 살아가 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 205명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35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인에게 장학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인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했다.

과학인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의계약 한도 상황과 해외 인재 유출 대비, 실재 자산화, 국제 협력 강화, 대체 복무 확대, 기초과학 지원 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 대표단 친수 및 간담회(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장학생 등 200여명 초청… “과학기술이 국가미래 결정”

“과학기술 천시한 시대 망해… 국가연구자 제도 도입할 것”

대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분야에선 실재 자산화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계약 문제는 조달하거나 계약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취지 같은데 (한도가) 2000만원이 너무 낮은 것 같다”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재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해외인재 환류를 위한 정책들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 기술 분야의 대체 복무와 관련해서는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성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 이행 때문에 상당 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거는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대체 복무는 현재 있던 한데 확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군대 자체도 대대적으로 바뀌볼 생각이다. 병력 숫자,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장비와 무기 경쟁인 시대다. 병력도 전문가로 양성하고, 첨단무기나 장비 체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길게 멀리 보면 기초과학이나 인문과학 분야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바닥이 탄탄해진다. 방향을 일부 전환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관한 연구 투자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우 의장 “지선·개헌 동시투표… 설 전후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와 관련해 “설 전후가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및 개헌을 중점 과제로 제시한 뒤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한다”며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실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을 두고

“광역단체 행정통합 적극 찬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합의 최선 노력 다하되 필리버스터 통해서라도 해나가야”

서는 “세상에 안 되는 일 없지 않나”라며 “대통령 뜻도 분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로소 국민투표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개헌 이야기할 때마다 국민의힘 큰 벽에 부딪혔는데 장동혁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귀가 번쩍 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개헌을 안 한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우원식을 믿고 해보자, 합의한 만큼만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 난망할 경우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중립이 몰가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외 잔여 임기 중점 과제로는 국회 개혁, 국회의 사회적 대화 제도화 등을 꼽았다. 우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입법부,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회의 사회적 대화 제도화에 관해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 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에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과제”라며 “국회 경호권 독립이 핵심이다.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전담 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과 12·3 비상계엄 이후 사회 혼란 등을 거론, “사회 변화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다”며 “혼란이나 견제하는 국회가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 개혁과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의지를 갖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해서는 “다행히 여야가 12일 본회의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만 본회의에 부의된 채 쌓인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한다”며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 동부권이 승부처?

통합 특별시장직 도전에 나선 전남 서부·중부권 출신 민주당 입지자들이 상대적 취약지인 동부권 공들이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6·3지방선거가 박빙 또는 근소한 차이의 흐름으로 전개될 경우 여·순·광 등 유권자가 밀집한 동부권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해남 출신이자 광주를 지역 구로 둔 민형배 의원은 이날 순천 아랫장을 방문한 뒤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민심을 청취한다. 이어 순천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순천대에서 통합특별시장 미래먹거리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주관한다.

나주와 화순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신정훈 의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순천대학교에서 ‘동부권이 통합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만이 해답입니다’를 주제로 주민공청회를 연다. 당초 지난 달 28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로 공청회 일정을 조정했다. 지난 달 30일 여수를 찾아 시민들과 동부권 균형발전을 논의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12일 자신의 고향인 고흥을 찾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설명한다. 13일에는 순천 지역방송에 출연, 통합 특별시의 미래를 제시한다.

안도 출신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9일 오후 여수에서 열리는 2026 세계섬박람회 도민보고회에 참석한다. 설 명절을 앞둔 13일 오전에는 여수·순천지역 전통시장을 찾는다. 설 연휴 기간 중에는 여수에서 귀향인들을 대상으로 세계섬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동부권 행보를 이어간다.

강시장과 김지사는 13일 순천대 우석홀에서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전남 동부권 타운홀미팅도 계획하고 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남 동부권을 잇따라 방문, 지역 경제 토론회와 토크콘서트, 소모임·간담회·전통시장 둘러보기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입지자들의 잇단 동부권 방문에 여수가 뒷받침 주철현 의원도 다음 날 오전 11시 순천 전남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 이후 미래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동부권을 상대적 취약지로 꼽는 서부권과 중부권 출신 입지자들은 여수·순천·광양지역 정치인들과의 전략적 연대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인구 180만명 중 동부권 주요 지역인 여수·순천·광양의 인구가 7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고흥·보성·구례까지 포함하면 동부권 전체 인구는 80만명을 웃돈다.

최근 동부권 경제의 핵심축인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산업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정가에서는 입지자 간 지지세 격차 폭이 크지 않을 경우 동부권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위기와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에 따라 표심이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시·도지사 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으로 선거구도가 바뀌면서 동부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점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